

폐지줍는 노인들 안전장구 외면...위험 안고 일한다

광주시·자치구 매년 교통안전용품 지원하지만 "주는 줄도 몰라"

지원물품 다양화 하고 교통안전 교육·지원사업 홍보 강화해야

광주지역에서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이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매년 수천만원 예산을 들여 이들에게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로 활용하는 이들이 드물기 때문이다.

폐지 줍는 노인들은 교통안전 용품을 주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령해도 활용을 하지 않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광주일보 취재진이 광주시 일대에서 만난 폐지 줍는 노인들은 하나같이 야광조끼, 삼각대, 자전거 후미등, 형광안전장갑, 안전띠(야광 끈) 등 교통안전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 품목은 지자체에서 구입해 나눠주는 것이다.

대다수는 밤에 위험한 어두운 색의 패딩 점퍼와 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리어카 또한 녹슨 철제 뼈대만 남아 어두운 곳에서는 식별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차도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고령에 반응속도도 느려 교통사고에 취약한데도 정작 안전 대책이라고 제공한 교통안전용품조차 활용도가 낮은 것이다.

이들은 지자체에서 교통안전물품을 나눠주는 사실을 몰라서 못 받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필요성을 못 느껴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 양림동에서 만난 A(86)씨는 조끼 등 안전

용품 없이 일상복만 입고 자전거를 끌고 폐지를 줍고 있었다. 자전거에 후미등이나 반사지 등은 붙여 있지 않았고, 안전띠가 아닌 새까만 고무 노끈을 쓰고 있었다.

A씨는 "3년째 자전거 타고 다니며 폐지를 줍고 있는데, 안전용품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낀다"며 "자전거로 차도를 다니는 것에 있어서도 큰 위험을 못느끼겠다. 안전용품을 착용하거나 입지 않아도 차들이 알아서 천천히 가거나 피해 가더라"고 말했다.

서구 쌍촌동에서 만난 B(68)씨는 "구청에서 안전물품이나 장갑, 마스크를 주는 줄 몰랐다. 준다고 하면 지금 당장 구청에 가겠다"며 "밤에 당연히 위험하고, 파지 줍고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들어받으려고 한 적도 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몰라서 못찾아 먹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2016년부터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교통안전용품을 제공해 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5월 폐지수집노인을 전수조사한 결과 광주에서 활동 중인 폐지 수거 노인은 616명으로, 광주시는 매년 2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 안전조끼 2735벌, 안전장갑 9655켤레, 손수레용 삼각대 1800개 등을 지원했다.

또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한 안전띠 350여개, 자전거 후미등 100여개, 경광봉 44개 등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폐지 줍는 노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지원 물품을 '몰라서 못 받는다'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행정복지센터나 고물상을 통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지원 사업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통안전용품 지원을 받으려면 지자체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폐지 수거 노인 대다수가 생계가 팍팍하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수집하고 있어 일일이 지원 신청을 할 여유를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광주시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안전용품 착용을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개인이 착용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폐지 수집 노인들이 기관 등에 등록된 것도 아니다 소재를 찾기 어려워 홍보가 잘 안 되니 결국 폐지를 매수하는 고물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에서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등 회피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통안전 교육과 지원사업 홍보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사자 대부분이 70~80대 고령인 만큼 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려면 더욱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폐지 수집 노인들의 지원 물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방향·방열 물품 등을 다수 포함시키는 등 변화를 주고 있다"며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실제 수요가 있고 자주 활용할 만한 지원 물품을 더 고민하고 교통안전 홍보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최근 광주시 동구 금동에서 한 폐지 수거 노인이 교통안전용품을 착용하지 않은 채 차도를 통행하고 있다.

“응급의료 위축 우려”...필수의료 과실인정 판결에 의료계 반발

광주고법 의사·병원 공동책임 판결

의료계가 응급·중증질환 필수의료 분야 의사와 병원 등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회(의학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응급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응급의료 행위 수행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의학회는 “의사가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상태로 시술하면서 야기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며 책임을 지우면 전공의는 어디에서 어떻게 숙련되느냐”며

“수련 과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광주고법은 경막외출혈 등 상해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마취통증의학과 1년 차 전공의 A씨와 전남대병원에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0월 데이트폭력에 의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에게 긴급 수술 시 수술이나 수액 투여에 대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하면서 동맥을 관통하는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검에서 사망 원인은 1~2mm 정도의 동맥 관통상과 그로 인한 다량 출혈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해당 시술 자체는 흔한 의료행위이지만, 대상 신체 부위가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쇄골 근처였기 때문에 A씨가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다”면서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이번 사례처럼 주위 동맥을 1~2mm 크기로 관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병원이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함께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무사 사칭 1800만원 뜯어낸 40대 입건

법무사를 사칭해 “못 받은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1천여만원을 받아 잡힌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40대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법무사를 사칭해 50대 여성 B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으로부터 A씨를 소개받은 B씨는 “동창에게 빌려준 뒤 못 돌려받은 9000만원을 돌려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사설 탐정 자격증 등을 보여주며 착수금, 공탁금, 인지도 등 명목으로 돈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받은 A씨와의 연락이 끊기자 B씨는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법무사 자격증 또한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종 전과로 10회 넘게 처벌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적도 있었으며, 지난해 2월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법무사로서 문중 일을 봐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았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서경호 침몰 실종자 수색 잠수사 투입 난항

선사 비용 없어 선체 인양 등 불가능

실종자 가족 구조 상황 공유 등 촉구

여수 앞바다에서 침몰해 10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제22서경호' 사고원인 규명의 키포인트가 될 선박 인양과 심해 잠수사 투입 등이 비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여수해경 등에 따르면 사고선박 인양과 잠수사 투입에 대해 서경호 선사 측은 선박 보험만으로는 인양과 잠수사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저 80m에 있는 서경호 인양에만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해경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서경호 선박 보험 보상은 19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사가 인양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강제로 인양을 할 수 있지만, 구상권을 청구해도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게

결국 정부에서 나서지 않는 이상 인양과 잠수사 투입 등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종자 수색과 사고 원인 규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서경호 실종자 가족들은 입장문을 내고 “심해 잠수사 투입 여부를 결정해주고, 수색 수색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한 적기 인양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침실, 기관실, 조타실 등 선내 실종자 발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해 잠수사 투입 여부를 이날까지 결정해주고 수색 수색과 관련해 주·간 회수를 지켜 특이사항 등을 충실하게 공유해달라는 것이다.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해 언제든 인양될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잠수부 투입, 인양에 대한 질문에 해경측은 ‘선사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무래도 비용 때문인 것 같다”며 “실종자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더라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정화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액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정량성 (도별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업체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청정!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